

대선후보 사칭까지... 상인 울리는 ‘노쇼 사기’ 극성

SOCIETY

2025년 5월 22일 목요일

올해 광주·전남 111건 발생...4월 건수 8배 폭증

5·18 희생자 유족 소상공인 2400만원 송금 피해

공무원 등을 사칭해 식당 등에 허위 주문한 뒤 다른 명목으로 선입금을 받는 이른바 ‘노쇼’(NO-Show) 사기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최근에는 대선 후보까지 사칭하는 사례까지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21일 광주·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5월 중 노쇼 사기 피해 사건 수는 총 111건(광주 84건·전남 27건)으로 나타났다.

1월 2건(광주 1건·전남 1건) 2월 4건(광주 4건·전남 0건), 3월 3건(광주 2건·전남 1건)에 불과했던 노쇼 사기는 4월 75건(광주 54건·전남 21건)으로 1~3월 대비 8배 이상 급증했다. 5월 현재 27건(광주 23건·전남 4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노쇼 사기는 특정 유명인이나 공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해 음식, 제품을 단체 주문한 뒤 연락을 끊거나 대리구매 명목으로 돈을 가로채는 범죄를 말한다.

특히 최근에는 선거 시기를 틈타 대선 후보 관계자라고 속인 뒤 금품을 챙기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광주 광산경찰은 이날 노쇼 사기 피해를 호소하는 식당 업주 A씨의 진정을 접수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이재명 후보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선거 캠프 관계자가 다음 날 저녁식사를 하러 오겠다는 예약 전화를 받고 준비 중이었다.

5·18민주화운동 희생자의 유족인 A씨는 이 후보가 5·18 기념식에 참석한 뒤 식사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이 예약자는 예약 당일 식사 준비 상황을 몰으며 마치 이 후보가 원하는 고가의 특정 양주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주류는 개인이 구매할 수 없으니 식당에서 대신 구매해 준비해 주면 돈을 지급하겠다는 특정 업체의 계좌번호를 알려줬다.

A씨는 이 말을 믿고 2400만원을 보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예약자는 ‘다른 일정이 생겨 예약을 취소하겠다. 비용은 보내드리겠다’고 말한 뒤 연락이 끊겼다.

뒤늦게 이 후보가 대선 후보 토론 일정 때문에 처음부터 광주에서 저녁 식사를 할 수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된 A씨는 경찰서에 찾아가 진정서를 제출했다.

경찰은 A씨가 입금한 돈이 흘러간 경로를 파악할 계획이다.

광주 남부경찰에도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앞에서 전화에 나서고 있는 소방관을 사칭한 신원 미상 인물에게 속아 20여만원 상당의 피해를 봤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주문자는 ‘김치점 15인분, 공깃밥 17개

를 전화가 한창인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으 로 보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의자는 뒤늦게 음식점에 “가고 있다”는 말을 하며 특정 업체의 전화번호를 전달해 방역복을 대신 구매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후 음식을 수령하지 않았고 업주는 준비한 음식을 모두 폐기 처리했다.

광주시청을 사칭한 ‘노쇼 사기’도 발생했다. 시청 직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사기범이 식당 측에 예약한 뒤, 특정 고급 와인을 구매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후 방문하면 식사비와 함께 와인값을 결제하겠다고면서 특정 주류업체에 송금을 유도했다. 하지만 해당 예약은 사실무근이었다.

전남 지역에서도 노쇼 사기 피해가 잇따랐다.

21일 여수에서도 공무원을 사칭하며 업체에 물품 구매를 의뢰하는 사례가 발생해 여수시가 주의를 당부했다.

민원인 B씨는 최근 시청 총무과를 찾아

휴대전화에 사진으로 저장된 명함을 보여 주며 해당 직원이 실제 근무하는지 물었다. B씨는 자신을 시청 주무관이라고 소개한 사람에게 ‘급하게 심장제세동기를 대신 구매해 주면 곧 예산 처리를 해주겠다’는 부탁을 받았다고 전했다.

하지만 명함에 적힌 이름의 직원은 여수시에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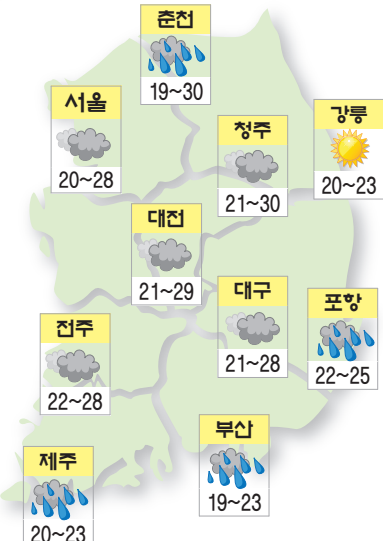
시는 시청 홈페이지에 ‘여수시청 공무원 사칭 및 물품 구매 사기 주의’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게재했다.

전문가들은 노쇼 사기 범죄는 보이스피싱처럼 사기범이 대포폰·대포통장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 보상이 어려울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정병곤 남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기관 사칭은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명예훼손 등에 적용될 수 있다”며 “노쇼 사기 예방을 위해 번거롭더라도 예약 보증금을 받거나 주문을 의뢰한 기관·단체에 대한 확인 전화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오늘의 날씨

예보 05:25 달출 01:35
예보 19:34 달진 12:51



광주		22~26
목포		19~25
여수		19~22
순천		19~24
구례		21~26
광주		20~24
임도		18~24
전남		15~19
고흥		19~24
진도		18~24

목포	밀물(고)	08:12 / 20:37
	썰물(저)	00:48 / 14:01
여수	밀물(고)	03:18 / 15:59
	썰물(저)	09:59 / 21:49

명의로동 사건대려...41억 골짜

만년필 ○...법무법인 직원에게 변호사 자격을 대여해준 현직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조용희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64)와 법무법인 직원 B씨(38), 프로그래머 C씨(51)의 첫 재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B씨와 C씨에게 자신의 변호사 명의를 이용하여 한 혐의로 기소.

B씨와 C씨는 같은 기간 약 3만 4000건의 형사고소 대리 업무를 진행하면서 41억원 상당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모두 공소사실에 대해 대체로 부인.

재판부는 증인신문 절차를 밟기 위해 재판을 오는 8월 속행하기로 결정.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수사 본격화

광주경찰청 전담팀 구성...36명 규모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와 관련해 광주경찰청이 전담수사팀을 편성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21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전담팀은 형사기동대 안전화재팀을 비롯한 형사 3개팀, 강력계, 수사심의계, 과학수사계 등 총 36명 규모로 꾸려졌다. 팀장은 총경급인 광주청 형사기동대장이 맡아 지휘한다.

경찰은 현장 목격자 등 진술을 확보하고 기계 설비·소방 시설 등의 안전관리 실태,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소방·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함께 합동감식을 진행, 각종 증거와 단서부터 확보한다. 이후 다각적인 수사로 화재 원인과 경위를 밝혀내고 과실 여부와 책임 소재를 가려낸다. 누군가의 과실이 확인되면 법리 검토를 거쳐 형사 처벌할 지 살펴본다.

경찰은 전남 원전 진화 직후 소방당국의 화재조사관과 함께 공장 외관을 둘러보는 식으로 사전 현장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경찰은 조만간 공장 관계자 등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검지지도자 양성교육 광주 서구 바르게 걷기 교육생들이 21일 서구청 들불홀에서 열린 '2기 검지지도자 양성 교육'에서 걷기전문강사로부터 보행자세 측정 및 걷기운동 지도법 등을 배우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41만명 개인정보 판매 20대 ‘유죄→무죄’ 이유는?

2심 “대법원 ‘마약 거래·보관만 처벌’ 판단 근거”

41만명의 개인정보를 사고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유죄 선고를 받았던 20대가 항소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 김진환 재판장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된 A씨(29)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10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B씨(30)의 원심도 파기,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6월 사이 온라인에서 20회에 걸쳐 31만464건의 개인정보를 판매해 735만원의 범죄 수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지난해 1월부터 6월 사이 10만 72건의 개인정보를 신원 미상의 인물들에게 판매해 210만원을 받아 갇힌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약 41만명의 이름과 휴대전화번호 등이 담긴 파일을 취득한 뒤 이를 재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은 마약을 거래하거나 보관한 혐의로 병합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판매한 개인정보의 양이 상당하고 유통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2차 범죄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으나 항소심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제외하고, 마약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 판결을 유지했다.

이는 대법원이 내린 ‘개인정보보호법상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그로부터 다량의 개인정보를 제공 받은 사실이 맞더라도, 이런 사정만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임영진 기자 looks@

만남, 당신에 이상형!

바로연

에서 인연을 만나다.

초혼·재혼 결혼전문업체 바로緣 1644-5432/062.381.0009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자유로 173 대영빌딩 3층 (상무지구 롯데마트 옆)

‘만남’에 우연이란 없습니다.

광주 · 서구 · 국내 · 09 · 0005호